금남로에서

호남권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장 필 수
예향40주년기념위원장

일본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1995년 발간한 '국가의 종말'이란 책에서 "전통적인 민족 국가는 종말하고 비지니스 중심의 지역 국가(regional state)가 등장할 것"이라며 메가시티가 주도하는 세상을 예언했다.

그의 예언대로 21세기 들어 국가가 아닌 도시 간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 지구촌은 현재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33곳이 국가 이름 대신 도시 브랜드를 내걸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주변 지역을 묶은 '그랑 파리 메트로폴'과 일본 오사카 중심 '간사이권'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공약을 내걸면서 메가시티가 쟁점이 됐다. 본격적인 관심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생존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양보와 타협으로 행정 통합까지

메가시티를 주도하는 곳은 대구·경북이다. 대구·경북은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승인받았고, 부산·울산·경남은 민선 8기 들어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그에 비해 호남권은 이제 막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4일 정읍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5개 항이 담겨 있는데 핵심은 호남권 3개 자치단체가 경제공동체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동맹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2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광주·전남·전북이 경쟁력을 갖춘 미래전략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광과 농어업 등 비교우위 자원의 실질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도 약속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7년 만이다. 메가시티 경쟁에서 밀리면 지역소멸 위험이 가장 큰 호남권은 회생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에 3개 시도지사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70년대 632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20.5%를 차지했던 호남 인구는 현재 495만 명으로 21% 이상 감소하면서 국내 인구 비율이 9.6%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인구가 3083만 명에서 5133만 명으로 66%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호남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추진중인 메가시티는 국제 도시간 경쟁력 확보보다 수도권에 대응해 살아 남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몸부림이다. 호남권은 가장 늦게 시작한 만큼 타 지역에 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착륙을 위해 경제동맹을 들고 나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실질적인 메가시티가 되려면 행정 통합까지 이뤄야 한다. 대구·경북과 충청권은 이미 행정 통합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호남권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행정 통합까지 나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전제돼야 한다.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2004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질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메가시티를 논의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 11번이나 모임을 가졌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영남과 충청권에서 치고 나오자 뒤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으로 폭을 좁혀보면 민선 7기 시절인 2020년 11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민간·군 공항 이전 갈등 등으로 없던 일이 됐다.

지역내 소멸위험지역 배려해야

이런 전력으로 볼 때 호남권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3개 시도의 이익과 맞물린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될 것이고, 전남·전북의 경우 서남권 관문 공항을 놓고 새만금과 무안공항의 경쟁이 그것이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전남은 추진중인 상황에서 두 자치단체가 행정 통합을 위한 메가시티에 얼마나 진심일지 의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메가시티가 성사되더라도 호남권 내 소멸 위험이 높은 군 단위 자치단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여년 전 마카오에서 만난 카지노의 대부 셸던 애덜슨회장은 "모든 투자의 기준은 투자 대상이 '데스티네이션(최종 목적지)' 인가 아닌가"라고 했다. 사람과 돈은 결국 인프라를 타고 최종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거치는 곳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호남권 메가시티도 결국은 광주와 전주 등 대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호남권 메가시티의 진정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해 주길 바란다.

社說

영호남 지자체 공동 요구 정부는 응답하라

광주·전남·부산·대구 등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는 그제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과제 8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 8개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 모두 SOC 확충 관련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협력과제로 이 가운데 핵심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마당에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기 때문이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도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정부를 향해 지방 교부세율을 5% 인상해 달라거나 종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요구도 결국은 지방 재정난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영호남 자치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를 줄이려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정부는 영호남 지자체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영호남 지자체들도 16개 과제에 모두 힘을 들이기 보다 재정난 극복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면허정지 철회… 이제 전공의 현장복귀해야

정부가 5개월째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애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복귀자에 한해 철회했는데, 이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참가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개월여 진행된 응급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그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하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수련병원의 교수들과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의정갈등을 회복할 전환점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 가운데 복귀하는 비율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자신들의 파업이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응급 의료와 필수 의료 등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함임을 강조해왔다. 이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는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응급실 안에서는 환자를 돌보고, 응급실 밖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이 올바른 투쟁 방식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투쟁이나 파업도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서 승리한 사례는 없다. 의사의 승리는 환자와 함께 일 때 가능하다.

은펜칼럼

피드백 없는 리더십, 성공 어려워

한 국 환
경영학 박사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기를 맞았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여전히 G2(미·중)의 패권 다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확전 우려,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긍정적 실태를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7월 1일)한 상반기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3117억 달러)은 6.5% 감소해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로 연말엔 사상 최대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울 명동 상권이 국내 M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K패션 매장 중심으로 되살아났다. 더구나 K푸드인 라면과 쌀 가공식품(김밥 포함), 음료, 김치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이중 유럽 김치 수출은 지난해에만 약 1800만 달러에 달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의 '늦깎이'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분야에 최근 수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 'K배터리'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세계적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실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기업의 올해 1분기 합계 매출이 4조 99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8% 증가했다. 더불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2022년)에 이어 손수 만든 k-21 전투기의 양산 계획(2026년)으로 첨단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 반가운 일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성공 덕분에 '한국어 열풍'이 세계적이다.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도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한국어를 대입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선정한 나라들(호주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도 설립 당시 세계 43개국 90개소에서 2022년에는 84개국 244개소로 확장됐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도 1991년 151곳에서 2022년엔 1400여 곳으로 늘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일은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6194달러)이 처음으로 일본(3만 5793달러)을 추월한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수치로서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위이며 수년 내 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렇듯 기업과 국민들은 땀 흘려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야 막말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아직도 삼류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국가경쟁력은 우상향으로 긍정적이지만 국정지지율은 거의 20%~30%대 초반으로 매우 낮다. 이것은 현 정부의 타협 없는 독단의 정치, 정책이 주술·무속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논란, 국회 법안의 15회 거부권, 그리고 각종 민심을 외면해 국민 불만이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 13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 정국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주변 몇 사람들 살리는 일보다 국민 전체를 살리는 일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연·지연 등 인맥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변 인물을 기용하기보다 인정받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적절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피드백이 무시된 리더십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양자기술,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최첨단과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이며, '시대정신'도 변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럼에도 잦은 정책 혼선, 세수 부족, 2천 명 의대 증원, 해외직구 제한, 한미일 중심의 치우친 외교 등 타협 없는 일방적 정책이 현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결국 '전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국가 통치자의 치명적인 실책이며 역량의 한계다. 민심은 천심이다. 대통령은 여러 채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와 OECD 1위의 자살률, 최하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치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기 고

사회적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빛나게

최 유 진
광주지속가능발전협 운영위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0번 목표인 '불평등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모두가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위계적이고 이윤 중심적인 기업 구조와는 다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구조는 공정한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불평등 감소와 사회적경제는 목표와 방법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불평등 감소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재미있게 보았다. 범상치 않은 초능력을 가졌던 가족들이 우울증, 불면증, 비만,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우리 주변의 흔한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해 능력을 잃어버렸다가, 여러 사건을 겪으며 능력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를 보며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많은 기업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기업들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찾기 힘든 인간애를 발휘하며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히어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가진 타임슬립, 예지몽, 독심술 같은 초능력은 없지만, 현실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영웅들이 바로 이들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장애인들과 함께 빵과 쿠키를 만들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시기에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기필코 지켜낸 사람들, 차별을 없애거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몸을 내던지는 활동가들, 그 누구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 모두가 우리 곁의 사회적경제 히어로들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역시 히어로가 되어보거나, 히어로를 도울 수 있다. 때마침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증진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이 있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정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등이 열렸고, '사회적경제 쇼핑몰 1만원 할인 프로모션은 14일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방화복 업사이클(새활용) 제품 생산 기업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 '119레오(대표 이승우)'이다. 이 기업의 비전은 "Only Brave People can Rescue Each Other (용감한 사람만이 서로가 서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이다. '119레오'는 폐기된 방화용품을 활용해 소방호스 필통, 방열복 카드 지갑, 방화복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소방관들에게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기업과 시민의 동참을 통해 치솟는 불길과 싸우는 소방관의 영웅적인 모습과 용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용기, 청년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 마을기업의 활동에 동참하는 용기, 경제적 포용력을 가진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용기, 만약 가능하다면 내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서 사회적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실행해 보는 용기,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구매를 보다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시켜 보는 용기까지 각각의 용기들이 모여 모두가 모두에게 '히어로'가 되어주는 지속가능한도시 '광주'를 그려본다.

無 等 鼓

개 대신 염소

복달임 음식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남도에서 양탕이라고 불리는 염소탕이다. 염소가 전통 보양식 재료로 이름을 날렸던 개(보신탕 혹은 구탕)는 물론이고 지금도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닭(삼계탕)의 아성까지 넘어설 기세이다.

네모난 눈동자를 가진 염소는 '턱에 수염이 있는 소'라는 의미에서 구레나룻 염(髯)자를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의 4분의 3에 이르는 국가에서 이미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가축이다. 전 세계에 600여 종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검은색 털의 '흑염소'는 뿔을 가진 염소 속의 작은 반추동물로 체격이 작고 성장이 더디지만 고기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염소를 보양을 위한 약으로 애용해 왔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액과 뼈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철과 칼슘 함량이 높아 체력 보충에 탁월한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염소탕은 추운 겨울을 이겨 내는 데 좋은 따뜻한 음식으로 인기가 많았다.

염소탕의 인기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강진 가축경매시장의 염소 경매가에서 확인됐다. 이날 숫염소는 한 마리(60㎏)가 최고액인 159만 5000원에 낙찰됐다. 이를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염소 고기는 2만 6000원이다. 최근 공급물량 증가와 소비침체로 가격이 하락한 한우 ㎏당 평균가격이 1만 5000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염소가 한우를 제치고 가장 비싼 식재료가 된 셈이다. 전국 7개 염소 경매시장 중 3개가 있고 가장 많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전남도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염소탕의 대중화를 위해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찾고, 새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한 점은 축산업으로서 염소 산업에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우리 주변의 동물 중 반려동물로 지위가 상승해 식용으로 쓸 수 없게 된 개와 인기 보양식의 반열에 올라 더 많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있는 염소가 교차하면서 드는 묘한 감정은 피할 수 없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